

##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 요약 |

-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 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크, 다자간 협상 및 동맹·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강화
  - (공화-트럼프)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및 전반적 관세 인상, 양자간 협상 및 동맹·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약화
  -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 (첨단전략산업) 반도체·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대중국 경쟁우위 유지 및 북미 수요시장 측면 기회요인 우세, 이차전지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친환경 정책 후퇴로 위협요인 우세 전망
  - (시스템산업) 자동차·방위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미국 및 동맹향(向)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이나, 트럼프 집권 시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소재 산업) 철강·화학 산업은 제조시설 입지 변화 가능성은 작으나, 트럼프 집권 시 관세·비관세 장벽 등 통상 여건 리스크 증가 전망
- (대응 방안)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경쟁우위 전략 유지·강화', 트럼프 집권 시 전(全) 산업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로 대별
  - (바이든 집권) 미국 및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 및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 (트럼프 집권)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대비 대미 협상력 제고, 중국 돌발 리스크 관리·대응 체계 고도화

■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 붕괴(1991. 12. 26) 이후 급속 진전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세계화’ 추세 구조적 변경 가시화
  - 과거 30년은 ‘미중밀월(美中蜜月)’로 요약되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 기지이자 한국의 제일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 역할
  - 중국 견제 기조가 미 국내 정치의 상수(常數)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판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미 대선 향방에 따른 속도 및 범위 차이가 예상되나, 결국 제조업의 전반적 탈(脫)중국 및 인도태평양과 북미(캐나다·멕시코 등) 이전 등 공급망 재편(Reallocation) 논의 본격화 추세 재확인<sup>1)2)</sup>

-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떼어 수 없는宿命적 연관이 그 본질적 특질(特質)
-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간 확대 및 심화된 한·중 산업·통상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리스크인 동시에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 및 고도화할 수 있는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 세계 주요국은 이미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시기를 맞아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모색,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타 국가 관점에서도 명확히 관측<sup>3)</sup>
- 현시점에서, 기회요인 포착과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신(新)산업·통상 전략 수립은 물론, 중요 국제정치 이슈에 업종별로 선제적인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

■ 본고는 미 제47대 대선의 향배(向背)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sup>4)</sup>

- 각 업종별 영향 분석은 미 대선 시나리오(민주-공화)에 따른 양방향 서술, 대응 방향은 본원적 경쟁우위 제고 관점에서 차이점을 도출
  - 7대 업종: ① 반도체, ② 자동차, ③ 이차전지, ④ 철강, ⑤ 화학, ⑥ 바이오의약품, ⑦ 방위산업

1) Select Committee Adopts Proposal to Reset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2023. 12. 12.  
 2) Global Supply Chains: The Looming “Great Reallocation”, Laura Alfaro & Davin Chor, The Jackson Hall Symposium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23. 8.  
 3)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크로스보더 투자 분과위원회, 2024. 3.  
 4)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주요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2024. 4)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 보고함.

〈표 1〉 바이든(민주) 및 트럼프(공화): 주요 이슈 공약·입장 비교

주요 이슈		바이든(민주)	트럼프(공화)
대중국 전략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리스팅(De-Risking)</li> <li>· 대중 현행 관세 유지</li> <li>·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li> <li>· 수출통제 강화(첨단분야 한정, 동맹 동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li> <li>· 보편·상호관세, 중국 최고 60%</li> <li>· 중국 최혜국대우(MFN) 철폐</li> <li>· 수출통제 범위 확대(금융투자, 지식재산, 인력 등)</li> </ul>
공급망 정책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 니어·프렌드쇼어링</li> <li>· 신뢰 동맹·파트너 역할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위주</li> <li>· 자국 중심 공급망</li> </ul>
통상 정책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Multi-lateral)</li> <li>· 인도태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간(Bi-lateral)</li> <li>· 보호무역주의</li> </ul>
환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그린전환</li> <li>· 기후변화 적극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산업 부흥</li> <li>· 기후변화 회의론</li> </ul>
제조업 보조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확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유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li> </ul>
		(공동)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 경기 부양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러시아 견제</li> <li>· 러·우 전쟁 장기 지속</li> <li>· 우크라이나 NATO 편입</li> <li>· 국제주의(Internationalism)</li> <li>· 동맹 연계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견제 우선</li> <li>· 러·우 전쟁 단기 종결</li> <li>· 우크라이나 일부 NATO 편입</li> <li>· 고립주의(Isolationism)</li> <li>· 동맹 비용·역할 압박</li> </ul>
국내 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확대</li> <li>· 고소득층, 기업 세율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감소</li> <li>· 전반적 감세, 규제 완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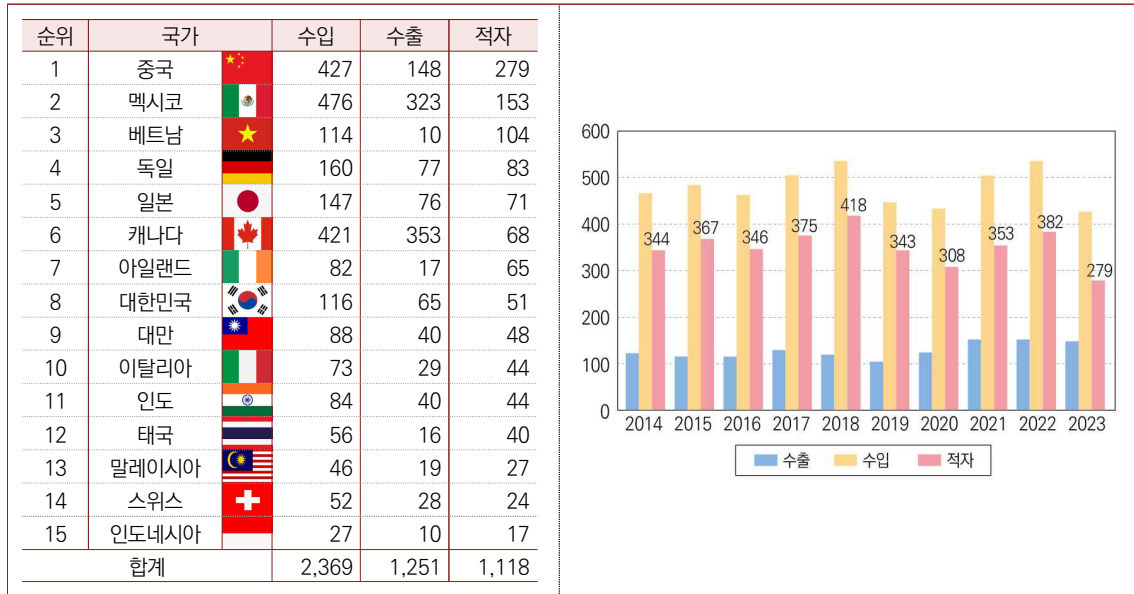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 대중국 전략과 공급망·통상, 기후변화,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 관련 바이든-트럼프 각 진영은 선명한 대립 구도, 그러나 대통령 선거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중국 견제에서는 수렴 가능성 점중

- 트럼프 집권 시 우리 주요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되나, 2기 집권은 마지막 임기로 극단적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될 전망
  - 향후 대선 외 상하 양원 선거 결과의 심층 분석 역시 필요하며, 공화당 내 기존 보수 세력과 트럼프가 대표하는 신규 진입 세력 간 입장 차 역시 독단적 정책 추진이 지속 견제받을 가능성을 시사

〈그림 1〉 2023년 미 무역적자 대상국 현황 및 대중 무역적자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Balance 활용 산업연구원 작성.

■ 미국의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는 중국 포함 아시아로의 제조업 유출 및 30여 년 이상 진행된 ‘러스트 벨트’ 중산층 붕괴뿐 아니라,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 국내 정치의 분열 및 혼란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

- 트럼프의 부상은 곧 미국 유권자 절반가량의 중국 견제 및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 민주당 진영 역시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 견제 기조의 ‘미 국내 정치 상수화’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 규모가 급증한 2022년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규모는 1조 달러 (약 1,350조 원)에 육박<sup>5)</sup>

■ 미 양당(민주-공화)의 대중국 견제 전략 기조는 동일하나 방법론상 큰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디리스크잉(De-Risking)’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大別)

- (민주-디리스크잉)<sup>6)</sup> 중국 수출제조업이 생산하는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5)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60-Present,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2년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 규모는 1조 1,830억 달러(1,600조 원),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2,318억 달러(313조 원) 수준.

6)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White House, 2023. 4. 27.

- (공화-전략적 디커플링)<sup>7)8)</sup>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대폭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군사·첨단기술 자립화(중간재 국산화) 진전은 필연적, 첨단산업의 왜곡된 경쟁 환경 시정 목적의 보조금 지급 정당
- 대선 각 후보(바이든-트럼프) 및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이슈별 입장은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나, 첨단전략산업 분야 연방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공통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sup>9)</sup>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상 중국 철강·알루미늄 등 소재 관세 인상 검토 명령과 조산·해운업 조사 착수<sup>10)</sup>는 결국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에 점차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 양 진영의 미·중 전략경쟁 외 제 분야 입장 대립으로,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주요 업종별 영향의 방향성과 수준, 대응 방향 역시 상이

- 보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 환경 정책 기조 변화 시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산업 리스크 증가, 러·우 전쟁 등 국제 분쟁 매듭 및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방위산업 수출 및 세계 시장 진출 불확실성 증가 전망

#### ▣ 주요 업종별 영향을 대선 양방향 시나리오별 요약 제시

##### ① 반도체

- (바이든) 미국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및 대중(對中) 수출통제로 중국의 추격 저지 효과, 그러나 향후 미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 격화 전망
- (트럼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관련 동일 지원 수준 대비 추가 투자 요구 등 가능성, 또한 중국 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 가능

##### ② 자동차

- (바이든) 주력 시장인 미국향(向) 내연차·전기동력차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7) No Trade is Free: Changing Course, Taking on China, and Helping America's Workers, Robert E. Lighthizer, Broadside Books, 2023. 6. 27.

8) Testimony of Robert Lighthizer Before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2023. 5. 17.

9) 반도체산업에서는 양당의 국내 선단공정 제조기반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위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입장이 동일,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의 보수 집권 계획 'Project 2025'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방 조직과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 하였으나,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향(向) 시설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 극단적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

10)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The White House, 2024. 4. 17.

- (트럼프)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로 인도태평양 및 중동 등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 상승과 환경정책 기조 변화로 전기차 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내 비중 확대 전망

③ 이차전지

- (바이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투자 확대 및 중국 기업의 미 시장 진출 제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나, 배터리 원료 및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우려
- (트럼프) 미 전기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대미 투자 위축 불가피

④ 철강

- (바이든) 탄소국경세(CBAM) 도입 진전 가능성, 지속가능 철강·알루미늄(GSSA) 등 친환경 비관세 장벽 강화 전망
- (트럼프) 미 무역확장법(232)조 근거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 강화 전망,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및 연방 조직 내 친환경 관련 인력과 재원 등 대폭 축소 가능성

<표 2> 주요 산업별 영향(1): 바이든 재집권

	수출입	국내 투자	국외 투자	공급망
 반도체	3 대중국 수출 점진적 감소	3 현행 투자 계획 유지	3 보조금 수혜 추가 투자	3 수출통제 동참 요구
 자동차	4 현행 관세 유지	3 국내 유턴기업 일부 증가	3 전기차 수요 하이브리드 대체	4 한국 부품업체 편입 가능성 ↑
 이차전지	3 수출 증가 유지 현지 생산 확대	3 미 전기차 시장 중장기 성장	4 IRA 보조금 현행 유지	3 탈중국화 기조 유지
 철강	3 CBAM, GSSA 비관세 장벽 ↑	3 현상 유지	3 현지 수요 대응 투자 유지 필요	3 공급망 리스크 현상 유지
 화학	3 대미 수출입 비중 미미	3 장기 관점 투자 지속	3 친환경 정책 유지 강화	3 영향 미미 유가 점진 하락
 바이오의약품	3 단기 변동 미미 장기 증가 기대	4 국내 유망 분야 투자 증가	4 대미 제조 투자 확대	3 투자 유치 기회 대미 의존 심화
 방위산업	3 미 진입 기회 해외 경쟁 심화	3 방위비 분담 소폭 인상	- 영향 미미	4 방산협력 진전 (조달협정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각 부문 영향은 매우 부정적 1 - 보통 3 - 매우 긍정적 5.

## ⑤ 화학

- **(바이든)** 대미 수출 비중이 작아 미·중 패권경쟁 및 분업 구조 재편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그러나 향후 중국 및 개도국의 비용경쟁력 기반 추격으로 수익성 악화 전망, 또한 미국 등 선진국 수출 시장에서 비관세 장벽 점진적 강화 예상
- **(트럼프)** 대선 국면 종료 이후 증장기 유가의 하락 안정화 및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도입 확대가 전망되며 트럼프 당선 시 유가의 단기 급락 가능성 존재, 현재 우리 기업 수익성 위협의 주된 요인은 중국 기업

〈표 3〉 주요 산업별 영향(2): 트럼프 집권

	수출입	국내 투자	국외 투자	공급망
 반도체	2 ICT 제품 고관세 판로 단기 충격	3 현행 투자 계획 유지	3 보조금 수혜 추가 투자	2 수출통제 동참 요구·수준 강화
 자동차	1 추가 관세 부과 가능	3 국내 유턴기업 일부 증가	3 하이브리드 내연차 비중 상승	4 한국 부품업체 편입 가능성 ↑
 이차전지	2 대중 수출경쟁력 ↑ 무역 장벽 강화	2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1 IRA 지원 규모 축소 우려	3 탈중국화 기조 유지
 철강	2 전통적 관세 쿼터 강화(232조)	2 교역조건 불확실성 증대	3 현지 수요 대응 투자 유지 필요	2 중간재 공급망 리스크 확대
 화학	3 대미 수출입 비중 미미	3 장기 관점 투자 지속	2 친환경 정책 퇴조	3 영향 미미 유가 단기 하락
 바이오의약품	3 미 시장 개방도 ↑ 장기 증가 기대	4 국내 유망분야 투자 증가	4 대미 제조 투자 확대	3 투자유치 기회 대미 의존 심화
 방위산업	3 미 진입 기회 해외 경쟁 심화	2 방위비 분담 추가 협상	- 영향 미미	2 방산협력 후퇴 원자재 수급 차질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각 부문 영향은 매우 부정적 1 - 보통 3 - 매우 긍정적 5.

## ⑥ 바이오의약품

- **(바이든)** 첨단 제약 분야에서 중국 견제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우리 주요 기업의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신약 및 신규 시밀러 개발과 시장개척 관련 미국·유럽 빅파마(Big Pharma)와 협업 가능성 점증
- **(트럼프)** 양 후보 공통으로 전반적 약가 인하 위한 바이오시밀러 도입 촉진,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에서 중국 배제 움직임 강화가 전망되며 트럼프 당선 시 美 국내 내수 시장 개방도 제고 예상



⑦ 방위산업

- **(바이든)** 현재 수출 호조 및 향후 글로벌 국지 분쟁 증가와 군비 증강 추세로 수요시장 증가 전망 및 바이든 재집권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비롯 한미 방산협력 지속, 방위비 분담 인상폭 제한(2024년 4월부터 협상 진행) 등 예상
- **(트럼프)**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추가 협상), 러·우 전쟁 조기 종료, 미 조달시장 접근성 저하(자국 기업 우대) 등에 따른 방산수출 감소 전망

▣ 대응 방향과 정책수요 역시 미 대선 시나리오별 및 업종별 요약 제시

① 반도체

- **(바이든)** 현지 시설투자 및 선단공정 수주 위한 외교적 대응 지원 강화, ICT 공급망 탈중국 추세 확인, 중장기 인도태평양 시장 개척 지원 필요
- **(트럼프)** 대만·유럽과 연계한 미국 내 지원 정책 형평성 보장 노력 및 ICT 수요산업 고율 관세 부과 전망으로 중국 중심인 우리 반도체 판로 단기 충격 완충 대책 마련,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전폭 지원 필요

② 자동차

- **(바이든)** 전기동력차 시장 성장 전망 견조에 따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기술경쟁력 확대 지원 강화 필요
- **(트럼프)** 환경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필요, 또한 국산차 고율 관세 부과 회피 노력 및 현지 제조시설 부품·중간재 원산지 규제 등 대응 지원 확대 필요

③ 이차전지

- **(바이든)** 전고체 등 차세대 소재·전지 기술력 강화 및 IRA 보조금 관련 FEOC(외국 우려 실체, Foreign Entity of Concern) 우려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내재화 추진할 필요
- **(트럼프)** IRA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ESS, 미래 모빌리티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및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인력·세제 등 분야 지원이 강화될 필요

④ 철강

- **(바이든)** 관세 인상 등 주된 견제 대상은 중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11월에 접근하며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 가능성 점증에 따라 교역조건 불확실성 심화 대비 및 탈탄소화 대응 친환경 투자 지속 필요



〈표 4〉 주요 산업별 대응 방향 및 정책 수요(1): 바이든 재집권

	대응 방향	정책 수요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주도 공급망 재편 성공적 적응</li> <li>· 탈중화권 기회요인 포착</li> <li>· 중국발 돌발 리스크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협력 기능 강화</li> <li>· 외교적 수주 지원, 국내 보조금</li> <li>· 수출, 소부장 충격 시나리오 마련</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수출 의존도 분산</li> <li>· 전기동력차 기술경쟁력 강화</li> <li>· 탈중국 기회요인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시장 조사·분석, 지원 강화</li> <li>·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R&amp;D 확대</li> <li>· 국내 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소재·전지 기술력 강화</li> <li>· 중국 소재 의존도 리스크 관리</li> <li>· 장기 관점 산업생태계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고체 등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li> <li>· 배터리 광물 소재 수입선 다변화</li> <li>· 전략산업 혜택 확대 및 지원 가속</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 조건 불확실성 심화 대비</li> <li>· 탈탄소화 대응 친환경 투자 지속</li> <li>· 공급망 리스크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수출 피해 방지 협상력 강화</li> <li>· 전기로 기술, 스크랩 경쟁력 강화</li> <li>· 원료 대체 수입선 확보, 비축 확대</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제품 원가경쟁력 확보</li> <li>· 친환경 전환, 신규 사업기회 선점</li> <li>· 탈탄소화 공통 기술 개발 및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계 원료(나프타) 세제 개선</li> <li>· 비화학 사업구조 다각화 전략 지원</li> <li>· 친환경 원료 및 연료 R&amp;D 확대</li> </ul>
 바이오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제조·신약개발 인프라 확대</li> <li>· 동북아 바이오 생산기지 허브 도약</li> <li>· 첨단분야 보안 및 IP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시설투자 외교적 지원</li> <li>· 탈중국 수요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li> <li>· AI 신약개발, 유망분야 R&amp;D 확대</li> </ul>
 방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수출 호조 기회요인 극대화</li> <li>· 한미 방산협력 지속확대 노력</li> <li>· 중국발 리스크 요인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수출지원 가동</li> <li>· 미 제조역량 부재 부문 시장 개척</li> <li>· 희토류, 부품 대응체계 구축</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5〉 주요 산업별 대응 방향 및 정책 수요(2): 트럼프 집권

	대응 방향	정책 수요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설투자 인센티브 최대 보장</li> <li>· 첨단 파운드리 대미 밀착도 제고</li> <li>· 중국 외 판로 다변화 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시 외교적 대응 지원 강화</li> <li>· 대만·유럽 연계 ▶ 정책 형평성 보장</li> <li>· 인도태평양 시장 개척 전폭 지원</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경쟁우위 강화</li> <li>· 관세 인상 압력 대응</li> <li>· 현지 시설투자 확대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정책지원(R&amp;D 등) 강화</li> <li>· 양자 무역 협상 간 양해 획득</li> <li>· 국내 리쇼어링 및 북미 진출 지원</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수요시장 전망·사업계획 조정</li> <li>· 장기 관점 산업생태계 지원 확대</li> <li>· ESS 등 신수요 창출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시장 투자 수익률 저하 대비</li> <li>· 해외 리스크 ▶ 국내 투자 기회로 활용</li> <li>· EV 수요 둔화 대비한 신시장 활성화</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력 제고</li> <li>· 중국·개도국 경쟁우위 추격 대응</li> <li>· 원료 도입선 다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쿼터 최대 확보, 관세율 현상 유지</li> <li>· 중국산 국내 저가 공세 대응책 마련</li> <li>· 원료 대체 수입선 확보, 비축 확대</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력 제고</li> <li>· 중국·개도국 경쟁우위 추격 대응</li> <li>· 원유 도입선 및 수출국 다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유 등 고부가 제품 시장 확대</li> <li>· 비용경쟁력 제고 인센티브 확대</li> <li>· 중국산 배제 경향국 시장 진출 지원</li> </ul>
 바이오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시밀러 수익성 악화 대비</li> <li>· 내수 시장 개방도 제고 수혜 노력</li> <li>· 탈중국 가속 기회요인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지원</li> <li>· 현지 영업력 개선 지원</li> <li>· 벤처캐피탈, PEF 투자 유치 지원</li> </ul>
 방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 매듭 가능 ▶ 수요 급감 대비</li> <li>· 미국 기업과 경쟁 심화 대응</li> <li>· 방위비 증액 요구 최대 축소·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시장 및 우주항공 진출 지원</li> <li>·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조기 체결</li> <li>· 방위비 산정 간 국산 도입 확대</li> </ul>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트럼프)** 쿼터 최대 확보 및 관세율 현상 유지 위한 외교·통상 측면 대응력 강화가 긴급,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으로 중국 기업들의 한국 내수시장 저가 공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시장 보호 정책 선제 마련 필요

⑤ 화학

- **(바이든)** 대선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되나 국내 비용경쟁력 제고 및 주요 기업의 사업 재편 필요성이 대두, 신규 시설투자는 신흥 개도국 및 일부 미국 현지 확대 가능하므로 대상국 인센티브 획득 지원 필요
- **(트럼프)** 동맹과 연계한 중국 개도국의 불공정 지원 행위 제한 및 국제 시장 접근성 저하 노력,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 배제 경향을 띠는 주요 대안 시장(터키, 인도 등) 공략 강화 지원 필요

⑥ 바이오의약품

- **(바이든)** 국내 및 대미 위탁개발생산(CDMO), 신약 개발 인프라 강화·확대 정책 지속 필요하며, 특히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액셀러레이터 등)와의 접촉 강화 시급
- **(트럼프)** 의료비 부담 경감에 보다 적극적, 이로 인해 신약·시밀러 약가 인하 추진(기업 간 경쟁 강화 방식) 가능성 높으나, 폐쇄적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 보다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입장으로 현지 영업망 확충과 협상력 제고 위한 지원책 신규 고안 필요

⑦ 방위산업

- **(바이든)** 미국 지원 동맹(분쟁지역)향 수출을 트랙 레코드로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미국의 제조역량 부재 부문(지원선 등 군함, 재래식 무기체계 등) 조달 시장 진입 노력 시급
- **(트럼프)** 러·우 전쟁 및 이·팔 분쟁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수요 급감 대비 필요, 중장기 미국·유럽 기업 경쟁 심화 및 자국 우선주의 대두로 조달 시장 진입 기회 축소 전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 그리고 방위비 증액분 내 국산 무기체계 도입 확대 추진 필요

▣ **(종합) 주요 산업 영향은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 **(대응 방향)** 바이든 재집권 시 제분야 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 ‘현재 경쟁우위 전략 유지·강화’, 트럼프 집권 시 전 산업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
- **(중국 견제 기조)**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국 견제 전략 기조가 수렴 및 장기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 산업은 이로 인한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즉, ‘전략논리’의 시대에 직면

- 미 제47대 대선은 한국 산업의 경쟁 여건에 심대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며, 양방향 시나리오에 따른 정밀한 업종별 영향 분석과 정확한 정책 대안의 선제적 생산 위한 자원과 역량 투입이 시급한 시점

〈표 6〉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과 정책 시사점

주요 이슈	주요 영향	대응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미·중 전략경쟁	제조 기반 내재화 중국 제조 의존 감소	현지 투자 확대 국내 투자 비중 보장	산업협력 컨트롤 타워 국내 보조금 등 도입
공급망 재편	탈중국 GVC 재편 인도태평양·북미 강화	기회요인 극대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	GVC 분석기관 신설 유턴·탈중국 기업 지원
친환경 정책	탈탄소 속도 조절 장기 추세 유지 전망	비관세 장벽 대응 장기 관점 투자 확대	통상 대응 조직 확대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제조업 보조금	생산	주요국 제조 시설 인센티브 강화	현지 협상 외교 지원 국내 세액공제 상향 전략 품목 국산 우대
	소비	자국 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	
외교·안보	세계 국지 분쟁 점증 방산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경제외교 강화	조달 시장 개척 지원 동맹 연계 수출통제
미 국내 경제 정책	미 소비 성장 견조 실물 경기 부양 전망	수출산업 지원 확대 비용경쟁력 제고	세제, 규제, 인프라 인력 양성 및 재배치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과거 30여 년간의 ‘미중밀월(美中蜜月)’ 종료 이후 전개될 신(新)통상질서하 한국 산업의 본원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대응 방향은 국가적 산업 통할(統轄) 거버넌스 정비, 신(新)산업·통상 전략 수립, 공급망 재편 기회요인 극대화,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네 가지로 요약**

① **국가적 산업 통할(統轄) 거버넌스 정비**

- 국내 산업 지원 인센티브(보조금, 세액공제, 연구개발 등), 진영 간 수출통제와 보복조치 등 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적시적인 사안별 외교적 협상력의 중요성 증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가적 산업협력 컨트롤 타워 마련 및 제 부처 기능의 통할 위한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한 시점

② **신(新)산업·통상 전략 수립**

- 과거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따른 중국 중심 공급망 세계화 국면에서 ‘전략논리’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에 진입함에 따라 업종별·권역별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

③ 공급망 재편 기회요인 극대화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성공적 적응을 위해, 북미 및 인도태평양 현지 시설 투자 대상 외교적 지원 및 정보(인텔리전스) 조직과 민관 협응 체계 강화에 정책 자원 투입 수준 대폭 확대

④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중국 및 러시아 등 원자재 보유국으로부터의 소재부품장비 소싱, 양안관계 긴장으로 인한 급변 사태 등 돌발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더불어 방어적 수단 외 동맹과 연계한 공세적 대응 방안 역시 새롭게 고안할 필요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 선임연구위원 | emjung@kiet.re.kr | 044-287-3064

경희권 신산업실 | 부연구위원 | khk880718@kiet.re.kr | 044-287-3288